



4일 여의도 국회 앞에 군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다.

독자제공/뉴시스



4일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담 넘고 무장 계엄군 막고... “국회 본회의장 사수”

지역의원들이 전하는 당시 상황

계엄령에 혼비백산... 서둘러 국회로 3개조 당번제 정해 계엄군 진입 막아 “전산시스템 생략하고 의결” 소란도 “본격 탄핵 절차 돌입... 역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효’가 선언되기까지 온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던 광주·전남 의원들도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4일 본보와 지역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위해 오후 11시께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함에 따라 지역 의원들도 서둘러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좌관들은 위협

하다며 본회의장으로 오는 길을 막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의원들도 비상 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빨리 작동하지 않아 빨리 그냥 의결해버리자는 소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해제됐으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민주당 상임 위별로 3개조 국회 당번제를 지정, 각 조 별로 8시간씩 국회 본회의장을 지켰다”고 당시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계엄 선포 이후 곧장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는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도 “(스마트폰을 통해) 서미화 의원과 함께 국회 내부를 생중계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각지에서 저녁 자리를 한 이후 국회 근처 숙소로 돌아갔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급히 국회로 향한 전남 의원들도 많았다.

조계원(여수) 의원은 “저녁 식사 후 퇴근했다가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국회 정문 왼쪽에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었는데, 이곳이 막혀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했다”고 말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저녁 약속이 있어 자리를 끝내고 숙소로 머물고 있었는데, 황급히 국회에 들어가 표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역시 “저녁 약속이 끝나고 TV를 보다 비상 계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놀랄 새도 없이 바로 뛰쳐나와 국회로 향했다. 다행히 입구가 통제되기 전에 들어갔으나, 나중에 도착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계엄군 투입에다 정문 통제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차량을 끌고 서울로 향했으나 시간이 워낙 촉박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오전에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는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18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광주지역 의원들도 당시의 긴박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전진숙(북구) 의원은 “오후 11시께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국회 경비대가 입구를 막고 있어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 담을 넘는 의원들도 수도룩했다”며 “하지만 상정까지도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이 짧지 않은데, 그 사이 공수부대는 점차 본회의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면 어떤 아수라장이 펼쳐졌을지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광주항쟁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다. 총칼을 겨누던 군경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2시간’을 보냈을 지 상상도 안 된다. 5·18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사태가 더욱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 같다. 이

제는 윤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욱(동남)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고 ‘실패한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통제할 수 없다. 계엄사령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순간부터 정부는 명백한 내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스스로가 국가 운영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했다. 쿠데타에 실패한 내란 수괴를 몰아내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이 지킨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 지역 의원으로서 이를 지키는 건 또다른 책무”라며 “탄핵안 발의 후 72시간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 말은 ‘그전까지 윤 정권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 없이 (탄핵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국회를 지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괴담 선동’이라더니... 김민석 주장 ‘계엄설’ 현실로

지난 8월 ‘국방 라인’ 인선때 제기 대통령실·국힘 “음모론이다”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하며 야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 ‘계엄설’이 현실화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해왔는데 해명들이 다 무색해졌다.

야당에서 계엄 준비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민석(사진)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꺼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지목하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특히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건 ‘탄핵 정국’이 오면 ‘계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령 키맨들이 모두 윤 대통령 모교인 중앙고 출신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용현 장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9월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가 하면, 계엄 선포 이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직접 이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계엄설에 무책임한 선동이자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왔다. 한동훈 대표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9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대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계엄 또 시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국회서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시국대회에는 민주당 추산으로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

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 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단 일분일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외신들, ‘계엄 상황’ 실시간 톱기사 긴급 타전

美 NYT·日 NHK·英 BBC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긴급 타전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일제히 톱기사로 긴급 타전하며 실시간 중계했다.

NYT는 “한국의 계엄령이 바이든과 미국의 핵심 동맹을 시험했다”며 “바이든 행

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보루로 한국을 의지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례 국제회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국외 개회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특별히 강조해 왔다고 조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미 동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대 독재를 외교 정책 기본 틀로 삼아온 바이든은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아사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대패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NHK도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이 재외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

영국 BBC도 이번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위대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